


보도자료 2018. 7. 2.	 <div>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div>	
	담당부서	인사총괄심의관실
	담당자	인사제1심의관 성원제 인사제2심의관 안금선 인사기획심의관 이재혁
	공보관실 ☎ 3480-1451	

대법관 제청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과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대법관으로 제청-

[제 청 내 용]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과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임명제청 하였음

[제 청 경 위]

○ 대법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춘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자,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

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고,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다음, 공식적 의견제출절차 등을 통하여 피천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대법원장은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며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였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는 물론 그 밖에 다방면으로 수집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 각각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그 중 10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였음
- 대법원장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하고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10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절차를 마련하여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사회 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하였다고 판단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임명제청하였음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 약력

1961. 4. 23.생 (57세) 전북 진안 출생

1979. 2. 우신고(서울) 졸업

1986. 2. 서울대 법대 졸업

1985.10.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7기)



1988. 법무법인 시민종합 법률사무소 변호사 1997. 송실대 노사대학원 겸임교수

2000.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2001.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200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003.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2003.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2005.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2007.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現) 20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2014.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 간사(現) 2017.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프로필

- 인권 신장과 정의 구현·민주주의 향상을 위한 헌신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1988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였음. 다양한 헌법·노동법 등 관련 사건에서의 변론 활동을 통하여 자유·평등을 비롯한 민주 사회의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왔음. 2017년부터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기본권

분야 자문위원으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함.

1989년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건설준비위원회’ 소속 화가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변론을 맡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등의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을 지적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냄. 이 판결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헌법상의 권리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택 가능성을 시사하여 우리 형사소송 절차를 한 걸음 진보시킨 판결’이라는 이유로 1996년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뽑은 10대 판결에 선정된 바 있음.

1992년 ‘ILO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의 집회 신고에 대한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대리하여 최초로 효력정지 결정을 이끌어 냄. 이에 따라 새로운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의 가능성을 열고 대규모 집회에 대한 경찰의 불허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의 향상에 기여함.

1994년에는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열람·등사거부처분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이끌어 냄. 이 결정으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단순한 수사기관의 시혜가 아닌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변호인 또는 피고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이 인정되었음.

-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노동법 전문가

변호사로 활동하는 동안 수많은 노동사건을 변론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법을 사회적 약자의 기준에 맞추어 재해석함으로써 다수의 의미 있는 선례 형성 및 오늘날 인정되는 근로계약의 기준 수립에 기여하였음.

서울대학교 병원 근로자 1,000여 명을 대리하여 제기한 법정수당 청구 소송을 통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던 노동현장의 관행을 근절시키고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정립하며 서울지방법원에 노동전담부를 설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또한 사용사업주인 회사가 파견근로자들을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된 업무와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 근로자파견이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고, 경영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일부 사업부문 내지 사업소가 아닌 법인 전체의 경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어 근로자 보호에 충실을 기함.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숭실대학교 노사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하였고, 노동법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음. 담당했던 노동사건의 변론기를 모아 ‘노동을 변호하다’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하기도 하였음.

- 활발한 사회 참여 활동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위원과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으로 활동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국민참여재판의 도입과 공판중심의 재판제도 개선에 기여하였음. 상고심 개선 및 하급심 강화, 노동법원 도입, 징벌배상제도·집단소송제도 도입방안 등 사법제도에 관하여 광범위한 연구와 논의를 추진하고, 위 활동의 결과를 정리하여 ‘사법개혁 리포트’를 출간하였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창립 멤버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무총장,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회장을 역임하였음. 그 외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 검찰공안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재직하였고 2014년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 간사로도 활동하고 있음.

- 동료 법조인들의 높은 신망

선후배 동료 법조인들로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인품이 훌륭하며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왔던 후보자의 활동과 인품에 대하여 변호사들 사이에서 신망이 높아 많은 변호사들이 존경하는 인물로 꼽고 있는 고 조영래 변호사 기념사업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되었음.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 약력

1963. 2. 7.생 (55세) 서울 출생

1982. 2. 경북고 졸업

1986. 2. 고려대 법대 졸업

1985.10.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7기)



1991. 3. 서울형사지법 판사

1993. 3. 서울민사지법 판사

1995. 3.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1998. 3. 서울지법 판사

1998. 3. 일본 와세다대학 교육파견

1999. 9. 서울고법 판사

2000.12. 일본 동경대학 교육파견

2001. 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3. 2. 전주지법 부장판사

2004. 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6. 2.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9. 2.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2010. 2. 대전고법 부장판사

2012. 2.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5. 2.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2016. 2.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8. 2. 제주지방법원장(現)

2018. 2.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부장판사(現) 겸임

○ 프로필

- 법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 기준 제시

1991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법리에 밝음.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고 당사자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재판 진행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분석하여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함.

특히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에서 다양한 가치를 종합적·심층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함. 대표적으로, 위헌정당해산 결정이 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지위확인 사건에서 최초로 위헌정당해산 결정의 효과로서 소속 국회의원이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하고, 미국 국적의 재미동포가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한 내용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복지 국가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으므로 국내에서 강제퇴거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이익을 위한 강제퇴거의 기준을 제시함.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하는 재판

사회적 약자의 배려와 보호라는 가치를 염두에 두고 재판과정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부모와 같이 난민신청을 한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접심사를 하지 않은 채 한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해서 난민법과 우리나라가 비준한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하면서 위 결정 내용을 구두로만 통지한 데 대해서도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함. 또한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 베트남 국적의 어머니가 한국 국적의 남편과 사전 협의가 없었지만 평온한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를 베트남으로 데리고 간 행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CJ CGV(주)가 계열회사에 스크린광고 영업대행업무 전부를 위탁한 것은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부당한 지원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재벌기업이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을 제재하고, 환경부가 용산 미군기지와 그 주변의 지하수 오염에 관한 환경조사결과의 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

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음.

- 끊임없는 연구 자세와 따뜻한 리더십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7년 민사소송 개정판을 발간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고, 도산사건과 행정사건의 전문가로서 도산법 및 환경법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집필하여 법학 이론의 발전에 기여함.

온화하고 스스럼없는 성품으로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 선후배 법관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으로부터 높은 신망을 얻고 있고, 뛰어난 친화력을 바탕으로 법원 직원은 물론 지역사회와도 격의 없이 소통하고 있음.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 약 력

1963. 10. 7.생 (54세) 광주 출생

1982. 2. 광주동신여고 졸업

1986. 2. 이화여대 법대 졸업

1987.10. 제29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9기)



1990. 3. 춘천지법 판사

1993. 3.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1995. 3. 수원지법 판사

1995.12. 의원면직

2001. 2. 인천지법 판사

2002. 2. 서울고법 판사

2004. 2. 서울중앙지법 판사

2005. 2. 광주지법 부장판사

2007. 2. 사법연수원 교수

2009. 2.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2. 2.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2013. 2.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2015. 2.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2017. 2.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8. 2. 법원도서관장(現)

○ 프로필

－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노력

1990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약 5년간 재직하였고, 이후 약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후 2001년 판사로 재임용되어 각급 법원을 거치면서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왔음.

약 28년 동안 법조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의 실천을 깊이 고민하여 왔고,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하여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그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음.

중증 구성원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중증의 현대적 의의와 민법상 성·본 변경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자녀가 어머니가 속한 중증의 종원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함으로써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칙을 충실히 보장하였음. 또한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하여 그 임원들이 성폭력범죄 예방조치의무와 가해자 분리·고발 및 피해자에 대한 상담 등 보호조치의무를 부담함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인권침해행위로서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여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기여하였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시장 내에서 공영주차장 건설을 실시함으로써 폐업 또는 휴업하게 된 시장 상인들에게 영업손실 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인정함으로써 공권력 행사에 대한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였고, 탈북자가 귀순사실 및 인적사항의 비공개를 요청하였음에도 합동신문기관이 이들의 신원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한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주의의무의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를 분명히 함.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자녀양육 안내시스템, 조기절차선별 및 조정전치주의 시스템, 사후감독 시스템 등 다양한 제도의 개선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 발전에 기여하였음.

- 탁월한 실무능력을 갖춘 법률가

해박한 법리와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섬세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파악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여 소송관계인의 신뢰를 받음.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여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가능한 한 경청하여 사실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함.

대표적으로 피보험자가 계곡에서 실족사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이 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미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신고가 마쳐지고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사기 내사사건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으며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현장검증 및 현장에서의 증인신문 등 집중적 심리를 거쳐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보험금 청구를 기각함. 이후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고 계획적인 보험사기 사건인 사실이 밝혀진 바 있음.

- 섬세하고 온화한 리더십

동료 및 선후배 법관과 직원에 대한 배려와 인화력이 뛰어나 법원 구성원으로부터 두루 신망을 받고 있으며, 차분하면서도 온화한 성품으로 상대방과 소통하고 화합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면서 사법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직 중 여성관계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신임경력법관 지도관을 자원하는 등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여 리더로서의 덕목도 두루 갖추고 있음.